

‘전주시민가상발전소’ 시민 에너지절약 실천

누리플렉스 계량기 설치 공동주택 대상 640세대 참여… 에너지절약미션으로 전력 절감·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주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 ‘시민가상발전소’를 운영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 수요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19일 전주시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올해 시민가상발전소는 누리플렉스 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20개소 가운데 16개소에 거주한 총 640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가상발전소는 전력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에너지절약미션’을 발령하고, 참여 세대가 평소보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 한 사람의 절약 행동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모아 전력수요를 낮추는 시민참여형 수요관리 프로그램으로, 평소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할 경우 성공작립금 1000원이 관리비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난 7월의 경우 에너지절약미션이 총 15차례 발령됐으며, 참여율은 약 69%를 기록했다. 같은 달 성공률은 약 45%를 기록했으며, 총 성공작립금은 496만8100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절감한 전력량은 총 1603.65kWh로 집계

됐다.

특히 이번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환산하면 약 669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효과에 해당한다.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약 5그루의 잣나무를 심어야 하는 규모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한 작은 절약 행동이 모여 전력 절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전주시에너지센터는 오는 22일에는 제23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시민가상발전소 참여 세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재우기 챌린지’와 ‘추천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에너지 재우기 챌린지’는 에너지의 날 주간인 18일부터 21일까지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을 사진으로 인증하고, 에너지절약미션 성공 횟수에 따라 소정의 포인트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추천인 이벤트’는 시민가상발전소 기존 참여자가 미가입 세대의 가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착순 50명의 추천인에게는 신규 가입자와 같이 5000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만호 기자

“건물 온실가스 총량관리체계 필요”

전주시정연구원, 기초지자체 실행모델 제시… 이슈브리프 발간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전주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기초지자체 차원의 총량관리 기반 구축과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제시한 ‘JRI 이슈브리프 제29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연구원 산하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이승한)의 기초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총량관리체계의 필요성과 전주시형 추진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전주시 건물 부문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2024년 배출량도 194만163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 톤)으로 2015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부문의 실효성 있는 감축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에너지원별로는 전력이 전체 배출량의 71.2%를 차지했으며,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은 2015년보다 20.2%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상업·공공 부문이 52.0%, 가정 부문이 47.0%를 차지해 대형 상업·공공건축물의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 관리와 주거건축물의 난방 효율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주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63.7%, 30년 이상은 46.5%를 차지해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총량 관리 대상은 노후도뿐만 아니라 건축물 규모와 밀집도, 실제 에너지 사용량 및 감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현재 전주시 건물 부문 인벤토리가 법정동·용도·에너지원 단위로 구축돼 있어 개별 건축물의 배출량과 연면적당 배출원단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한계로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권한, 전담 인력·예산 부족과 민간 수용성도 규제형 총량제

를 즉시 도입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전주시가 총량관리를 시작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부서·기관 간 추진체계 구성 △건물 단위 데이터 연계체계 설계 △공공건축물 에너지·시설정보 확보 △공공건축물 목표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공공건축물 시범 사업의 경우 △건물별 데이터 구축 △기준배출량 산정 △대상 선정 △에너지 진단·개선 △감축성과 검증이 이어지는 전주시형 관리 모델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대형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고·등급제와 감축 협약을 운영하고, 에너지 진단과 컨설팅, 시설 개선 지원 및 우수건물 인증을 연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규모 노후주택과 에너지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우선지원 대상으로 구분하고, 단열·창호·냉난방설비 개선과 에너지 복지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 시범사업의 감축성과, 행정비용, 비용·편익과 민간 수용성을 평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제 정비, 적용대상 확대와 의무관리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승한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전주시에 지금 필요한 것은 총량제 선언이나 즉각적인 규제가 아니라 건물별 배출량과 감축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공공건축물에서 실행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확대하는 방식은 다른 기초지자체도 참고할 수 있는 실행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국가중요시설 드론 폭발 테러 대비 실제훈련 실시

12개 유관기관 150여명 참여 민·관·군·경·소방 합동훈련 진행

전주시는 19일 국가중요시설인 농촌진흥청에서 조지훈 전주시장을 비롯해 제9585부대 2대대와 농촌진흥청, 덕진경찰서, 덕진소방서 등 12개 유관기관의 인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중요시설 드론 폭발 테러 대비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전시 상황과 테러 등 비상 상황 발생시 드론을 이용한 공격으로부터 전주시의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실제 훈련은, 미상의 드론이 농촌진흥청 건물에 충돌해 건물 일부 폭파 및 화재 발생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은 △군·경 도착 후 초동 조치 △직소방 작전 △소방서 화재 진압 및 사상자 구조(병원 후송 등) △시설물 피해 복구 조치 등 순서로 실시됐

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주시의 국가중요시설에서 테러 발생시 민·관·군·경·소방의 합동 대응 능력을 높여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상의 비행물체 2대가 국가중요시설을 테러한 상황을 가정해 실제과도 같은 대응 훈련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혹독한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 지역 안보를 위해 훈련에 임해주신 군·경·소방 및 유관기관에 감사드린다”면서 “유관기관 간



전주시는 19일 국가중요시설인 농촌진흥청에서 조지훈 전주시장을 비롯해 제9585부대 2대대와 농촌진흥청, 덕진경찰서, 덕진소방서 등 12개 유관기관의 인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중요시설 드론 폭발 테러 대비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상호 보안을 통해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마케팅 지원

전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키로 했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은 디지털커머스 전문시설인 ‘소담스퀘어 전주’를 통해 2026년 하반기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35개사를 상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높이고,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부터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과 라이브커머스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먼저 진흥원은 소상공인이 전문 촬영 장비나 별도의 제작 인력 없이도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내 폰으로 찍는 제품 사진 촬영’ 교육을 운영한다.

이 교육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제품 촬영 방법 등 실제 온라인 판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는 △제품 사진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용 숏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들은 제품의 특성과 정보

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소상공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기업 홍보용 숏폼 영상이 제공돼 온라인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온라인 판로 분야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및 기획전 참여 △라이브커머스 제작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이 사업을 통해 온라인 판매 준비 단계부터 콘텐츠 제작, 플랫폼 입점, 라이브커머스 등 판매 확대 단계까지 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8월 주민세 70억원 부과

전주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8만1000건, 총 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주민과 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로, 8월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부과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2500원씩 부과된다. 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의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는 6만2500원부터 26만 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또한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시는 주민세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납세의무자 변동사항 등을 점검해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